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유성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6.

발 의 자 : 유성엽 · 김중회 · 이종걸
조배숙 · 김관영 · 정동영
노웅래 · 김경진 · 김병욱
조훈현 · 박범계 · 이용주
김광수 · 윤영일 · 손혜원
이용호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다만,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·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).
- 나.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).
- 다.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,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·의결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마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

양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5항).

바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사.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비밀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(안 제11조).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명예회복 등에”를 “등록에”로, “국무총리”를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를 “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

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제1항 중 “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제6조 중 “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”을 “위원회는 소관 사항을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기념탑”을 “기념탑,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

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⑥ 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·조건·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)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<u>명예회복</u>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국무총리</u>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등록에</u> ----- -----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<u><삭 제></u>
1.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<u>등록에 관한 사항</u>	
2.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<u>명예회복에 관한 사항</u>	
3.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	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명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	③ ----- ---- <u>9명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

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 략)

제4조(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하되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해당 시·도 지사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유족 등록)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(유족 등록) ① -----
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6조(사실조사)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7조(관계 기관의 협력의무)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·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기념사업)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동학농민혁명 기념관,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

2. ~ 4. (생략)

제9조(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) ① ~ ④ (생략)

제6조(사실조사)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-----

-----.

제7조(관계 기관의 협력의무) 위원회는-----

-----.

제8조(기념사업)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기념탑,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(無償)으로 양여(讓與)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⑥ (생략)

<신 설>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⑥ 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·조건·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</u> <u>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</u> <u>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11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</u> <u>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</u> <u>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</u> <u>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</u> <u>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</u> <u>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</u> <u>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</u> <u>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</u> <u>무원으로 본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